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태 평가

환경부는 2003년도 상반기중의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지난 8월말에 발표하였다.(※ 2002.10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권이 환경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음) 평가 내용을 본지에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부 〉

환경부에서 지도·단속체계, 지도·단속실적 등 21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가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이 함께 파트너 관계를 맺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의 시·도지부 민간환경감시단, 강원 환경감시대,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 등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가 환경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상반기 평가결과 대부분의 시·도가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지도·단속결과와 언론공개, 환경신문고 운영 등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단속업무의 위임에 따른 증원인력의 충원이 지연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등의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환경부에서는 배출업소·단속활동 등 환경관리가 미흡한 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며 '03년도(1~12월)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 환경관리실태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년초에 실시할 계획이다.

1. 2003년도 상반기 시·도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가. 종합평가(총 평)

- ◆ '03년 상반기 시·도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업무 등 환경관리실태를 종합평가한 결과
- 전체적인 단속업소수는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권한을 시·도로 위임('02.10월) 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 다소 증가(216개소)하였고, 단속율과 위반업소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발건수는 크게 감소(△25.4%)
- ※ 전년 동기간 대비 고발건수는 406개소가 감소(△25.4%)한바, 시·도별로는 서울·부산 등 9개 시·도는 고발건수가 증가하였으나, 7개 시·도(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줄어 들어

단속의 실질적 내용이 약화 되었음

- 단속율과 위반업소수가 지난해 상반기 보다 감소한 것은 업무위임에 따른 증원인력의 충원 지연, 단속에 대한 열의 부족 등으로 판단되며
- 고발건수의 현격한 감소는 단속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지역경제 우선, 지역여론 중시 등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는 강력한 단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전년 동기간 대비 단속 실적 비교〉

구 분	'02 상반기	'03 상반기	증·감(%)
단속대상 업소수	88,292	92,490	4,198(4.7)
단속업소수	52,273	52,489	216(0.4)
단속율	59.2	56.8	△2.4
위반업소수	3,806	3,501	△305(△8.0)
위반율	7.3%	6.7%	△0.6
고발건수	1,598	1,192	△406(△25.4)

나. 분야별 주요 평가결과

〈지도·단속체계 분야〉

- 배출업소 지도·단속 팀제 운영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도·단속 전담팀(산업환경팀 등)을 구성하여 통합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환경관리과(또는 환경위생과, 환경보호과)에서 대기·수질·유독물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청소과(또는 청소행정과, 생활위생과)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따로 실시하고 있어 통합지도·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과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시·도(시·군·구 포함) 공무원 230,672명중 배출업소 관리인력은 1,444명으로 배출업소 관리인력 비율은 시·도 전체인력의 0.62%이며
- 1인당 관리대상 평균 배출업소수는 64개소였음(전체 배출업소수는 92,490개소)

-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업소수가 작은 곳은 울산(40개소), 충남(46개소), 전북(46개소), 부산(47개소), 광주(51개소), 강원도(5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남

㉔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와 합동단속 실시 등을 위하여 시·도, 환경감시대 등 단속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은, 주기적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합동단속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단계임

㉕ 단속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 「자율환경감시대」등을 구축하여 지역환경문제 해결 및 배출업소 단속에 적극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나 경기, 강원,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러한 감시활동이 배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하천순찰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의 환경감시 우수 참여 사례 : 사회지구 민간환경감시대(경기도 시흥시), 강원 환경감시대(강원도), 제주 민간환경감시 패트롤(제주시)

⇒ 지도·단속체계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곳은 울산, 경기, 충남, 전북이며, 미흡한 기관은 서울, 대전, 전남 등으로 나타남

(지도·단속계획 수립분야)

㉖ 통합지도·단속계획 및 합동단속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무허가 배출시설 단속계획, 영세업소 등 기술지원계획, 부도업소의 방치폐물 처리계획 등도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치 않음

- 무허가업소 적발 및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미흡

- 영세업소 선정기준 및 기술지원 일정 등 세부추진 계획

- 부도업소 방치폐물 현황, 소요예산 확보 방안 등의 구체적인 계획

㉗ 배출업소 자료관리실태는 시·도별로 배출업소를 임의 선정(20개소)하여 업소현황카드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도·단속시 파악한 최근 자료를 기재하지 않는 등 적정관리되지 않고 있음

⇒ 지도·단속계획수립 분야에서 우수기관은 충북, 광주, 대전, 충남, 경북이며, 미흡한 기관은 인천, 강원, 서울 등으로 나타남

(지도·단속실적 분야)

○ 시·도별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업소를 임의 선정(20개소)하여 통합지도·단속을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기·수질배출업소는 통합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장 폐기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분야별 단속실적의 경우 대기배출업소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단속은 연간 단속대상업소수의 50% 이상을 실시하였으나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한 상반기중 단속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았음

※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기초자치단체(구)로 전면 재위임한 서울시의 경우 배출업소 지도·단속실적이 전년 동기간 대비 39.8% 감소

⇒ 지도·단속실적 분야에서 우수기관은 울산, 충북, 부산, 광주, 강원이며, 미흡한 기관은 인천, 서울, 대구 등으로 나타남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

○ 행정처분 대상업소중 118개업소를 선정하여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이중 70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었음

- 행정처분은 지도·단속결과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한 날 또는 다른 단속기관으로부터 지도·단속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일부기관에서는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즉시 실시하지 않고 지연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음

- 단속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오염도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개선기간을 정하여 즉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하나 일부기관에서는 개선명령을 지연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음

- 샘플을 선정하여 조사한 118개 행정처분 업소중 109개 업소는 사후관리 이행상태를 현지 확인하였으나 9개업소는 시설 개선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 대부분 단속기관에서 관할구역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보도자료 제공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운영실태를 단순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환경신문고 응대실태 평가를 자체적으로 분기 1~2회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 실시는 9개 시·도와 18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음

※ 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전국의 222개 시·군·구에서 별도 운영

⇒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분야에서 우수기관은 충북, 부산, 대전, 경기이며, 미흡한 기관은 강원, 전남, 서울 등으로 나타남